

野 “崔 직무유기, 몸조심하라”... 與 “불법테러 선동” 반발

李 “중요한 헌법상 의무 이행 안 해 직무대행 권한 남용 즉각 중단하길” 현재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촉구도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자,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 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22일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에 선고 기일을 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9일째에 고지했다.

탄핵심판 심리가 장기화되자, 야권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정작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동요하는 분위기가.

민주당은 전날(18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지명하라고 압박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를 지적하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대통령 임명), 3인(국회 추천), 3인(대법원장 지명)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

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다”며 “현재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내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엔 “현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현재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천명(천이재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대표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을 대신해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란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과 협박이 지금 도를 넘고 있지 않나”라며 “더 이상 내란과 갈등, 불안이 지속되지 않게끔 이제는 현재가 결정할 때가 됐다”는 취지에서 국민들 다수의 의사를 대변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론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나가는 막말과 협박을 가했다”며 “도대체 거대 야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이 들었다. 명백히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대놓고 신변위협 협박을 한다면,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건 이 대표가 아니라 최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野,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더라도 **崔 대행 특검 임명 안 할 가능성** 與 법사위원, 항의 의미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찬성 11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도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마약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좌천됐다는 이유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밝혀질까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안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안’과 관련해 특검

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김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두 상설특검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제1소위 퇴장 직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상설특검안을 ‘당론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두 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험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험적인 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을 것 같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여론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서예진 기자 syj@

“보험 청구권 신탁 규제완화·실손 청구 전산화 등 지원 요청”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 업계 “법적·제도적 지원 절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보험업계와 만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 업계는 보험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와 실손보험 전산화의 의료계 참여 등을 국회가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현승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월요일에 여러 금융·보험 산업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며 “헬스케어, 반려동물에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최근에 기후 문제가 있다보니 날씨 보험의 적용,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보험

업계도 여러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다”고 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 산업은 국민 생활 안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산업”이라며 “보험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어려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 청구권 신탁의 규제 완화, 실손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등 보험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편의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업계 스스로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당면한 어려움을 기회로 전

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 또한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